

코로나-19 위기의 성격과 대응 방향

정태인(독립연구자, 4.6)

최근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분명히 생태 파괴의 결과이다. 동물(박쥐나 낙타)에만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생태파괴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는 팬데믹이 되어 사람을 괴롭힐 것이고 중국에는 기후위기로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 80년간 유행한 인수공통 감염병은 약 70%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다. 80년대에 유행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유인원, 2004~2007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새,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돼지로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SARS)와 최근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옮겨왔고 메르스는 낙타, 코로나-19는 다시 박쥐다.

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는 바이러스의 세계화이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산업화는 생태를 파괴했고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번져나갔다. 뿐만 아니라 기후 온난화에서 살아남은 병원체는 사람의 체온에 더 쉽게 적응한다.¹⁾

<상자 5> 삼과(三過)

어쩌면 과유불급은 어느 한 부분의 지나침이 나머지, 또는 전체 체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해서 결국 아니 함만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이른 말인지도 모르겠다.

최재천교수는 “지나친 밀접함”이 과거 생태계가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한 어떤 균형 상태를 무너뜨렸다고 얘기한다. 평생 직접 보기 힘든 박쥐가 인간 세계에 그만큼 가까워졌고 박쥐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박쥐를 매개로 인간에게도 옮겨 왔다. 박쥐와 인간은 지나치게 밀접해졌다.

이 “지나친 밀접함”은 첫째로, 인간 세계(문명?)가 자연을 좀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생겼다. 화석연료가 없었다면 자연을 파괴할만한 에너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지나친 에너지 사용”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낳았다.

둘째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지나친 밀접함”을 낳았다. 특히 하루에도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속도를 높였다. 재화와 사람들도 금융의 논리에 맞춰 재계 움직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이동 속도도 그만큼 높아졌

1) 기후위기와 전염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린피스의 기사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2074/blog-health-climate-virus/?fbclid=IwAR2XMPDL6urm1XE0_OJXUNkAVf6T5Jk09NeVaORtEaTyTKJmsrAILSSCwTE)와를 참조하라.

다.

셋째로, 위의 두 현상은 “지나친 불평등”을 낳았다. 불평등이 심하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공동의 행동을 하기는 커녕 각자 도생으로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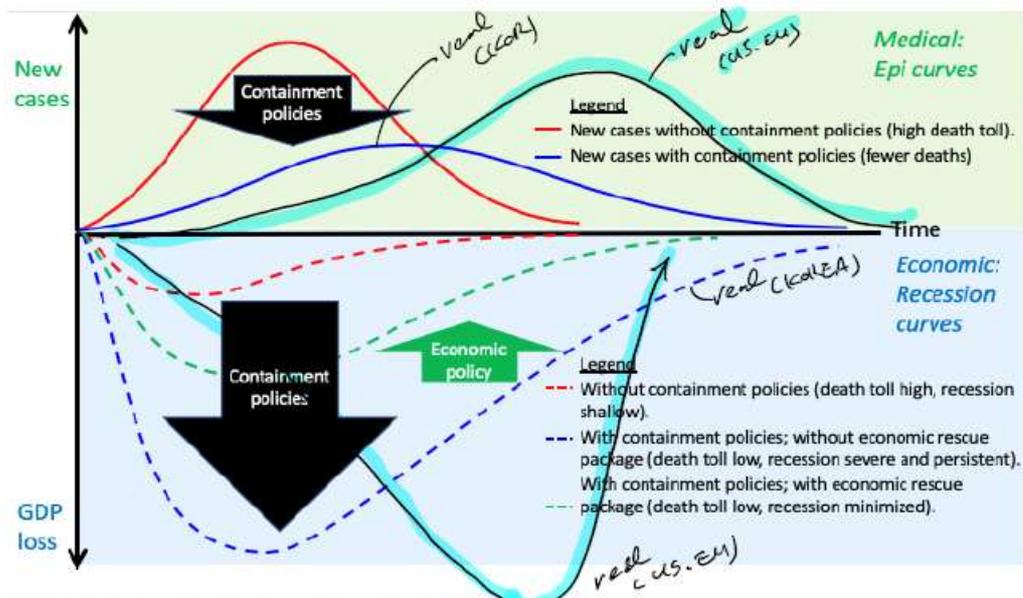
이 “삼과”를 줄여야 한다.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온난화의 속도를 줄여야 하고(탄소세 등) 사람의 이동속도를 높일게 아니라 금융의 이동 속도를 줄여야 하며(토빈세 등), 지나친 불평등의 핵심인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부동산 보유와 금융보유세 등). 이걸 국가에 의한 자유(물건의 자유, 즉 소유)의 규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간이 이런 지나침을 막기 위해 스스로 세웠던 공동체의 자율(오스트롬)을 글로벌 차원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한 대규모 재정투자의 내용을 그린뉴딜로 한다면 우리는 바이러스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를 동시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단기의 응급 “코로나 뉴딜”을 디딤돌로 삼아 대규모 “그린 뉴딜로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세 위기를 차례로 극복할 수 있다.

(1) 두 가지 방역전략과 성과

<그림 6> 방역과 경제의 관계

Figure 3 The recession, made worse by containment policy, can be mitigated with economic policy.



Source: Author's elaboration based on Gourinchas (2020).

<출처> Baldwin, 2020, p5

이 그림 상단 부분은 감염의 미분방정식에서(또는 ABM 모델에서) 도출된 것으로 코로나-19²⁾의 확진자 분포이다. 통제(containment, 진단-추적-치료라는 적극적 의료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범 + 봉쇄정책)가 없는 경우 바이러스는 붉은 선의 신규 확진자 분포를 보인다. 붉은 곡선의 상단 부분은 의료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많은 사망자를 낳는다. 한편 통제 정책을 사용하면 푸른 곡선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납작한 곡선 만들기(Flattening the Curve)”라고 부른다. 즉 통제정책을 통해 감염의 속도를 늦춰서 최정점에 달했을 때도 신규 확진자 수가 의료자원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붉은 곡선과 푸른 곡선은 각각 “집단면역(Herd Immunity)”전략과 통제전략을 나타낸다. 집단면역 전략은 지역봉쇄, 자택 격리 등의 강한 통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노인이나 기저 질환자 등 유증상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의료자원을 보호하려고 한다.

실제로 “독감에 불과하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암묵적으로 아베 일본 총리가 집단면역 전략을 염두에 두었다.

방역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경우 인구의 60%가 면역이 생겨야 전염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한다(붉은 곡선과 푸른 곡선 밑의 면적은 인구 60%로 전제된다). 즉 한국으로 치면 3천 만명이 확진자가 되어야 하고 현재의 한국 치사율에 해당하는 1% 정도가 죽는다면 30 만명, 이탈리아 치사율로는 300 만명이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결론은 “기본 재생산 지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_0)”에서 직접 도출된 것이다. R_0 는 이 세상이 순수한 감염대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코비드-19의 R_0 는 보통 2.5 정도(즉 1명이 2.5명을 감염시킨다)로 잡으니 더 이상 감염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R_0=1$)를 만들려면 면역자의 숫자가 인구의 60%가 되어야 한다($1-(1/2.5) = 1.5/2.5 = 0.6$).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르면(간단한 미분방정식의 결과는) 붉은 선 그래프와 푸른 선 그래프 아래의 면적(즉 총 확진자 수)이 동일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감염자는 바로 색깔로 구분되고 동시에 확진자로 계산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감염자=확진자가 아니다.

2) 외국 문헌에서는 현재의 감염병을 흔히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로 부르는데 하뉴에서는 코로나-19로 굳어진 듯 하다.

하지만 R_0 는 매우 복잡한 수학적 모델에서 도출되는 수치여서 가정에 따라 매우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고 현실은 순수한 감염대상으로 가득차 있지도 않다. 현실의 R 은 면역자의 증가에 따라 점점 적어질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감염 즉시 격리할 수 있다면 속주를 찾을 수 없어 바이러스는 갈 곳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수식에 입각한 “집단 면역” 전략은 현실에선 비극을 낳았다(이탈리아의 경우는 <상자 6> 참조).

<상자 6> 이탈리아의 비밀

3월 13일 뉴욕타임즈는 롬바르디의 의사들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방치할 것인가를 매 시간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나이는 이 비윤리적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료 자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낀 채 널부러진 간호사의 사진은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왜 이탈리아에는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치사율도 5%를 넘는 것일까? 이탈리아의 의료시스템은 영국의 NHS를 본떠 만든 강한 공공의료체계(SSN, Servizio Sanitario Nazionale)로 말 그대로 “무상의료”이다.

미국처럼 진단만 받는데도 몇 천달러가 청구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첫째로 유럽에서도 가장 노인이 많은 사회(65세 이상 23%, 한국 15%)이다. 이미 드러났듯이 코비드-19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둘째로, 이탈리아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의료투자가 줄어들었다(GDP의 6.8%로 감소). 셋째로, 아주 강한 지역자치 때문에 지역간 의료격차도 크다. 결국 중증 환자들이 의료시스템이 좋은 곳으로 몰려들었고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 사는 롬바르디 지역도 거기에 해당한다. 넷째, 롬바르디는 전체 인구의 15%가 사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롬바르디에서 60%의 확진자가 나왔다. 다섯째, 롬바르디 등 북부 이탈리아는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다. 이 오염과,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우한 역시 공업지대로 대기의 질이 나쁜 곳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최초 확진자가 나타난 시점이다. 이탈리아 최초 확진자(36세 남성)는 2월 20일에 나타났다(한국은 1월 20일).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서 경각심이 높았고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른 시점에 최초 확진자(중국인 30대 여성)를 발견할 수 있었고 방역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금년 초,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는 예년보다 많은 폐렴 환자가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실상 코비드-19 환자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문턱 낮은 의료 시설에 환자들이 몰렸을 테고, 병원 등 의료센터는 전파센터가 되었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한 나라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국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탈리아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은 최초 출발지를 속여서 들어왔다. 지금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 국내 감염이 시작됐고 아직도 검사를 별로 하지 않으면서 유럽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를 외치는 미국 대통령이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이다. 결국 국내 여행도 금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이는 이탈리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월등히 많은 검사를 해서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이미 병이 깊은 환자들을 확진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치사율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교훈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의료체계는 훌륭하지만 첫째, 의료투자를 소홀히 했다. 경제도 나쁘고, 특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조가 훌륭한 시스템, 빈약한 예산을 초래했다. 둘째, 지역간 의료격차가 커서 환자들이 가장 의료시설이 훌륭한 롬바르디 지역으로 몰렸다.

우리는 지방의료원 등 거점 병원 확충, 의사 및 간호사 증원(기존 의사들이 저항한다면 공공의료 트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팬데믹이 거듭될 게 틀림없다면 이 방식으로라도 의사, 간호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 등 기본적인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이견 중기 계획을 세워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면에서 한국 방역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작동했고 국민들은 이를 잘 따랐다.

팬데믹의 발생, 환자의 치사율 모두 생태위기와 관련이 있다. 팬데믹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전 세계가 “생태전환”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 일본, 북한 인접지역이 동시에 “그린뉴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동아시아 생태기금을 만들어서 기후위기에 관한 공동 정책,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구도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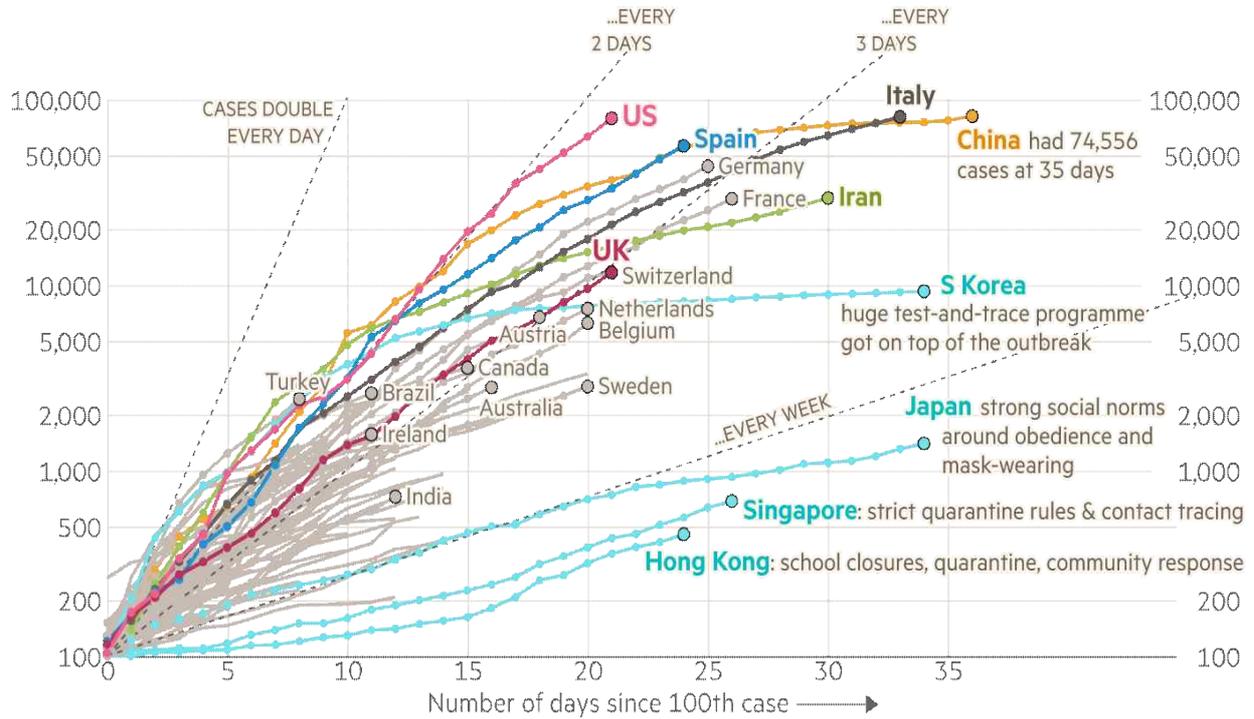
초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방치되었던 감염자들이 무더기 중증 환자로 드러나자 시민들은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료진은 살릴 사람과 죽을 사람을 분류하는 윤리 딜레마를 맞아야 했다.

초기에 집단면허 전략을 택했던 국가가 실제로 맞은 현실은 <그림 6>의 하늘색(가운데 검은 실선) 그래프이다. 초기에는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의 숫자가 적지만, 중증 환자가 나타나면서 많은 진단을 하게 되면 환자는 급증하게 된다. 이미 중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으므로 사망 비율도 월등히 높다. 즉 집단면허가 사망자는 많지만 감염 상황을 단기에 끝낼 수 있다는 가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스웨덴만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 세계1위, 강한 개인적 책임을 자랑하는 스웨덴이 “집단 면역” 전략을 성공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연대가 패닉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림 7>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3.26)

Country by country: how coronavirus case trajectories compare

Cumulative number of confirmed cases, by number of days since 100th case



FT graphic: John Burn-Murdoch / @burnmurdoch
 Source: FT analysis of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Worldometers; FT research. Data updated March 26, 19:00 GMT
 © FT

<그림7> 은 우리의 하늘색(+검은 실선) 그래프를 현실에서 확인해 준다. 지역 봉쇄와 국경 폐쇄를 하지 않는 중간 정도의 통제 정책을 사용한 한국은 3월 20일 경부터 확진자가 100명 전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그림 8> 참조, 방역학자들은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작은 변화를 보이는 상황을 댄싱(dancing)국면이라고 부른다), 인구가 1/5에 불과한 스웨덴은 확진자가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곧 한국의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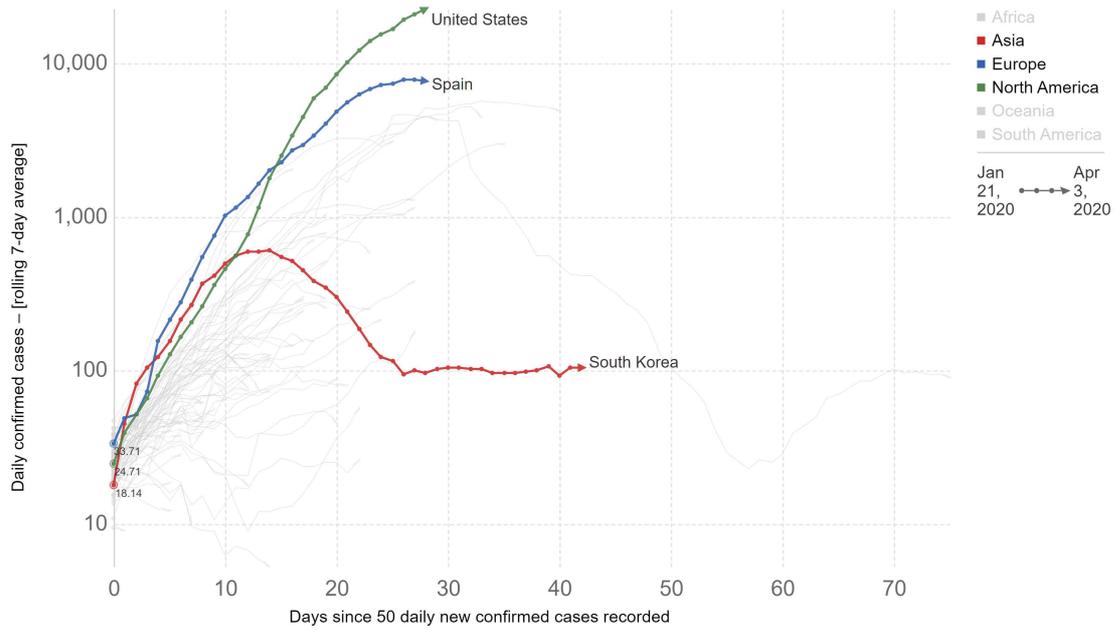
한국보다 인구가 1,000만명 정도 많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여서 적절한 통제정책을 사용한 한국, 가장 강력한 통제정책을 쓴 중국이 훨씬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림 8>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Daily confirmed cases of COVID-19

Our World in Data

The starting point for each country is the day that country had first reached 50 confirmed case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lower than the number of total cases. The main reason for this is limited te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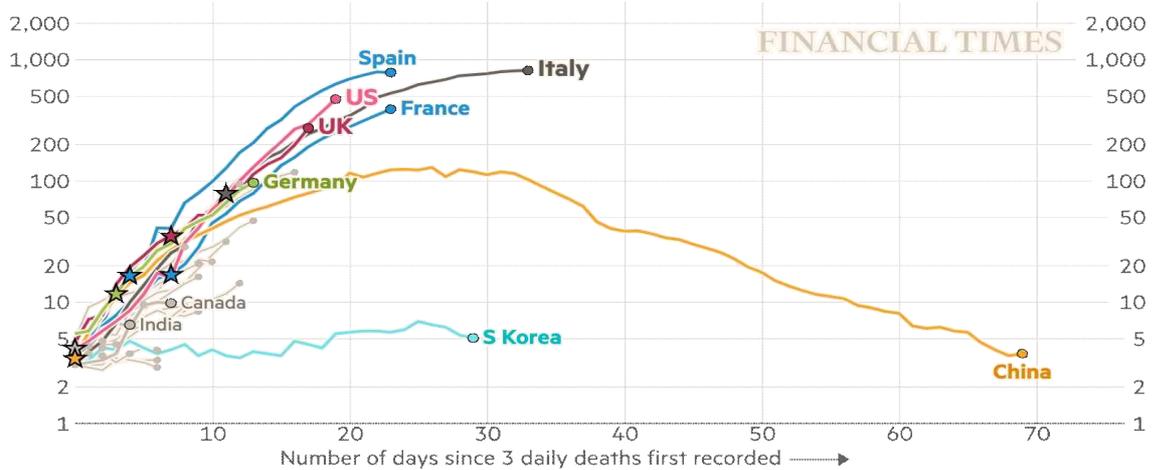


Source: European CDC – Situation Update Worldwide – Last updated 3rd April, 11:30 (London time) OurWorldInData.org/coronavirus • CC BY

<그림 9> 하루 신규 사망자 추이

Italy and Spain's daily death tolls are plateauing, but in the UK and US every day brings more new deaths than the last

New deaths with coronavirus per day, by number of days since 3 daily deaths first recorded
Stars represent national lockdowns ★



FT graphic: John Burn-Murdoch / @jburnmurdoch
Source: FT analysis of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Worldometers; FT research. Data updated April 01, 19:00 GMT © FT

어차피 인구 60%의 면역이 생겨야 끝나는 질병이므로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사실상의 방치전략은 감염자(확진자)의 수치, 사망자의 수치 등 모든 면에서 통제전략에 비해 나쁜 결과를 낳았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60%가 감염되어야 끝난다”는 단순한 주장은 각국 그래프 아래의 면적(총 확진자)을 비교해 봐도 간단하게 기각된다.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지닌 유럽 국가들의 총 확진자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상자 7> 방역 다양성(Variety of Disinfection)

“자본주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 홀과 소스키스)” 만큼 방역의 다양성도 흥미롭다. 처음에 서방 언론은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강조했다. 특히 초기에 우한 정부가 임상의의 보고를 무시한 것이 화제가 됐다. 더구나 그가 사망함으로써 중국 상황은 비극으로 채색됐다. 곧 이어 우한 전체를 봉쇄하고 일주일 만에 병원을 세운 것도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됐다. 이에 비해서 민주주의 한국은 투명한 정보 제공, 도시 봉쇄 없는, 신속한 대응으로 모범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처럼 뒤늦게 총력 대응을 하다 의료자원의 한계에 다다른 사례가 나타났고 영국은 “집단 면역(사실상 방치)”라는 전략을 택했다.

중국과 한국은 총력 대응을 해서 이른 시간에 사태를 종식시킨 “동아시아 모델”로 잡힐지도 모른다. 이 모델은 확실히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방역은 전쟁(“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비유가 유행인 것 처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쟁을 시장에 맡기자는 미친 경제학자는 없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행착오의 장이다(바로 여기서 혁신이 나타난다). 하지만 방역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시행하면서 가장 괜찮은 걸 ‘선택’할 수는 없다. 과거의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신속하게 실행할 국가의 능력,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능력(동원)이 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한다. 동아시아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5>를 보면 좋은 방역 성과를 보이는 나라들(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한국의 성공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겪지 않은) 메르스의 경험이 큰 기여를 했다. 민간병원들에도 응급 병상을 마련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공개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NIS와 유사한 이탈리아 의료체계(SSN)가 붕괴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 개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앵글로 색슨이라는 이름 아래 한 묶음인 미국도 영국 모델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영국과 미국도 부랴 부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예컨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블라드 총재는 “봉쇄(lockdown)는 투자”라고 외치며 철저한 방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훌륭한 의료보험을 가진 교수가 코로나-19 진단을 무료로 한 이후에 진단만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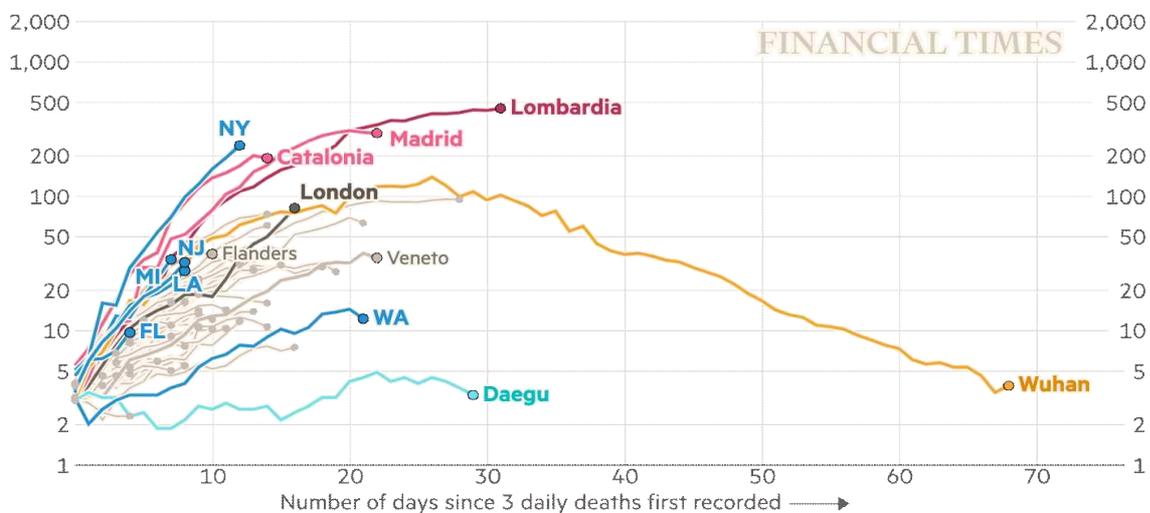
서 2,000달러의 청구서를 받은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추적과 치료가 가능할까?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5~8> 보여 주듯이 미국은 확진자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자본주의 다양성에서는 자유시장(앵글로 색슨) 대 사회민주주의(유럽)의 대립이 부각되었지만 방역 다양성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대 서방(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더 두드러진다. IT(와 중국의 경우 AI)의 활용과 문화적 차이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도시 별로 보아도 각국의 대응 방식이 낡은 결과는 뚜렷한 차이가 난다.

<그림 10> 도시 별 신규 사망자 수 추이(첫 세 사망자 발생 이후)

New deaths in Lombardia and Madrid are flattening off, but the death toll is climbing ever faster in New York and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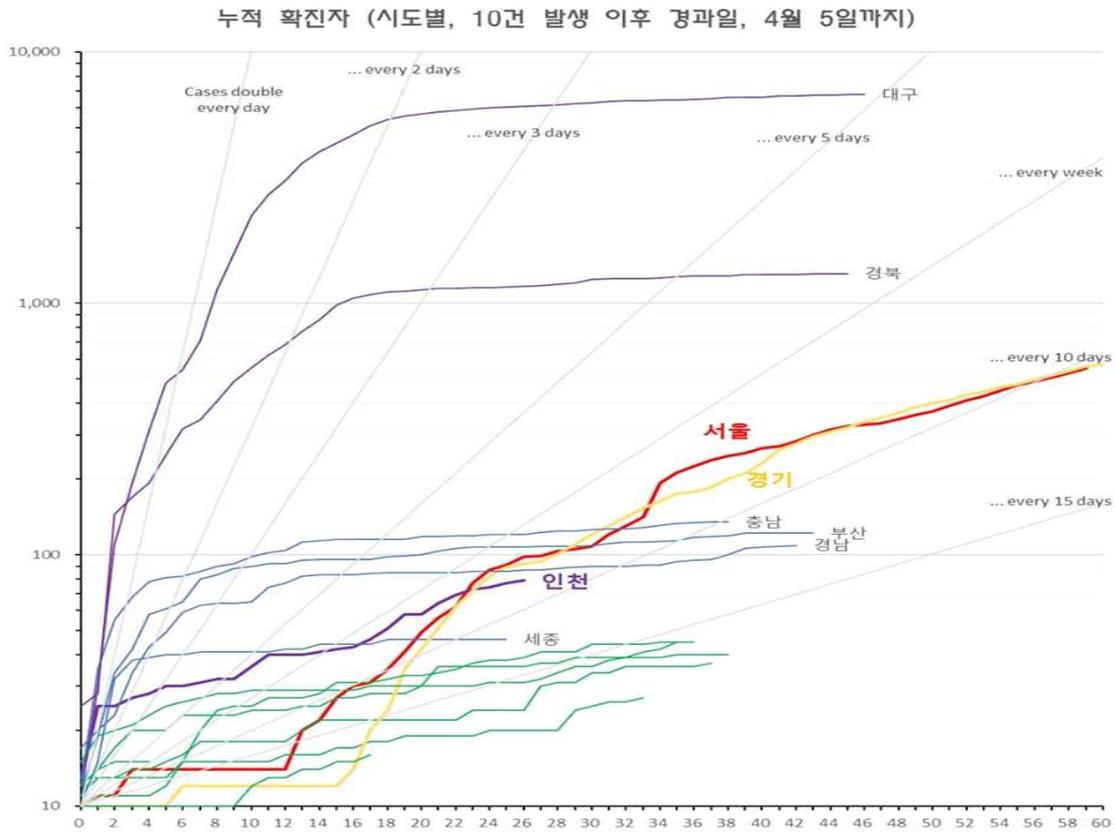
New deaths with coronavirus per day, by number of days since 3 daily deaths first recorded



Sources: NHS; Covid Tracking Project; Proviencialdata19; Santé Publique France; Berliner Morgenpost; OpenZH; Stockholm University; Leuven University. Data updated April 01, 19:00 GMT
FT graphic: John Burn-Murdoch / @jburnmurdoch
© FT

한국의 의료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대구의 경우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우수한 방역 결과를 보였다. 현재 한국은 서울-경기 지방의 확진자 증가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그림 10>). 수도권에 이런 현상은 입국자의 검사를 강화한 데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다중 시설이 몰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한국 시도별 누적 확진자 추이(10건 발생 이후)



<출처> 신현호 페이스 북 (4월 6일)

(2) 경제위기의 성격과 대응 방향

성격 - 바이러스와 경제, 생산-금융-수요 쇼크의 상호 상승작용

흔히 방역과 경제 간에 트레이드 오프(상쇄)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통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구린차스(2020)는 방역과 경제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염두에 두고 <그림5>의 하단 부분을 그렸다. 하단의 붉은 그래프는 “집단면역”에 상응하는 경제성과이다. 즉 집단면역전략 하에서 사람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할 것이므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고 경제회복도 빠를 것이라는 가설이다.

하지만 경제 역시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 “집단 면역” 전략을 택했던 나라의 국민들이 바이러스 패닉에 빠지자 정부는 서둘러 강력한 봉쇄 정책(자택 격리, 지역 봉쇄, 국경 폐쇄)을 택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경제를 위축시킨다. 특히 취약한 의료시스템 위에서 혼란스러운 전략을 택한 미국 경제가 가장 위험해 보인다.

<그림 11>는 지난 3월 27일 뉴욕타임즈 1면이다.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The New York Times

VOL. CLXXIX No. 58,845 FRIDAY, MARCH 27, 2020

JOB LOSSES SOAR; U.S. VIRUS CASES TOP WORLD



Seen from the common dormitory on Brooklyn Hospital Center three weeks ago, the staff has handled some 900 potential cases.

New Data Shows Staggering Toll of Outbreak

The article is by Kate Conroy, Patricia Cohen and Jeffrey Mize.

More than three million people have been hospitalized because of the new coronavirus since it was first identified in Wuhan, China, in January. The toll is still rising, but the government has not yet reported the total number of death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on Friday that the number of deaths in the United States has risen to 107,000.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on Friday that the number of deaths in the United States has risen to 107,000.

Unfilled Posts Force Scramble By Washington

By JENNIFER HARRIS and ERIK LARSEN

WASHINGTON — As the 19 million coronavirus cases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rise, the federal government is scrambling to fill a growing number of vacant jobs in Washington, D.C., that are critical to the nation's health care system. The government is trying to hire people as fast as possible to help it manage the crisis.

Online Class With No Way To Get There

By MEREDITH WADSWORTH

Ms. Phillips was excited about picking up an online health class in March. But now, she is stuck at home. She can't go to work, and she can't get to school. She is stuck at home.

Courage at a Brooklyn Hospital, At the Front of an Invisible War

By MEREDITH WADSWORTH

It was one crisis after another. The hospital was overwhelmed with patients. The staff was exhausted. The hospital was overwhelmed with patients.



Weekly unemployment claims in the United States.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Labeling Begins by Risk

WASHINGTON — The government is starting to label people who are at risk of spreading the coronavirus. The government is starting to label people who are at risk of spreading the coronavirus.

No Crowd, but I'll Take You Out to the Ballgame

By DAN RABIN

PROBATIONER JAMES GIBSON is a fan of the New York Yankees. He is a fan of the New York Yankees.

A Fan Writes a Fantasy for Opening Day

By DAN RABIN

From the moment the first ball was pitched on Opening Day, the Yankees were the favorite to win the World Series.

BUSINESS

Armed With Sewing Machines
With supplies in short supply, people are making their own masks.

A Goulash Can't Be Contained
A goulash restaurant in Hungary is struggling to keep its doors open.

INTERNATIONAL

Maduro Is Indicted in U.S.
The U.S. government has indicted the leader of Venezuela.

Notary Publics Kivalo Returns
A notary public in Hawaii has returned to work.

Brushing Aside a Slaughter
A slaughterhouse in California is facing a lawsuit.

NATIONAL

New Focus on Health System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improving the health care system.

Starting Over on Foster Care
A foster care program is starting over.

Show to Embroise a Delay
A show is being delayed.

WEEKEND ARTS

For Post-Save Philanthropists
Philanthropists are looking for new ways to give.

It's Virtually Perfect
A virtual reality experience is being developed.

SPORTS

Champion of U.S. History
A champion of U.S. history is being honored.

Globetrotter's Dream of Double
A globetrotter is dreaming of a double.

Paul Krugman

하단의 노란 그래프는 매주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치를 보여 준다. 평균 30만명이던 신청자는 3월 둘째 주 330만명으로 10배 증가했고, 셋째 주에는 660만명으로 증가했다.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지수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³⁾. 이러한 증가세로 보면 연간 실업을 30%를 넘겨서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낳을 수 있

3) 여기에는 물론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형 자본주의 다양성이 작용했을 것이다.

다4).

즉 “집단 면역” 전략은 바이러스 감염 뿐 아니라 경제위기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바이러스 패닉과 경제 패닉은 상호- 상승하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이 두 면에서 확실히 “실패 국가(failed state)”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장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실업자와 집에서 쫓겨난 임차인이다. 이들은 살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감염은 확산된다. 이를 막기 위해 더 강한 봉쇄정책이 구사되면 경제위기는 심화된다.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드러나겠지만 <그림5> 하단부 그래프도 집단면역, 그리고 뒤늦은 강력한 봉쇄조치는 경제에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그래프 하단의 하늘색(+검은 실선) 그래프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은 팬데믹의 “팬”(범)에서 잘 드러난다. 바이러스는 거의 예외가 없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연쇄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어냈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라이제이션 경향 속에서 생산도 세계화했다. 바이러스 위기가 심각한 나라가 어떤 생산사슬(밸류체인)에 속한다면 그 나라 기업이 속한 모든 생산사슬이 마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방한 토요타의 적기생산방식(JIT, Just In Time)은 투입 재고를 최소화했으므로 생산의 마비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쇼크”가 발생해서 생산활동의 갑작스러운 중단(sudden stop)이 벌어진다.

따라서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생산이 회복되더라도 생산사슬 전체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생산쇼크는 지속된다. 적절한 통제정책을 사용한 동아시아의 지역생산사슬의 회복이 가장 빠를 것이다. 예컨대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PMI)는 2월 35.7에서 3월 52.3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금융쇼크가 도사리고 있다.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들 나라의 기업이 달러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했다면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1997년 외환 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외환보유액과 지역의 달러 스왑라인이 얼마나 튼튼한가가 이 “금융쇼크”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⁵⁾. 현재의 생산쇼크가 바로 영향을 미쳐서 금융위기로 바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자원수출국. 그리고 생산네트워크의 하류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일 것이다.

국제적 채무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결한 예는 1953년 런던 채무협상이다. 이 때

4)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실업율은 10% 정도였다.

5)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실행한 “양적 완화”는 자산 버블을 일으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번 바이러스 위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금융 완화 정책을 내 놓았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요동쳐도 단 기간 내에 금융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개 채권국들은 독일의 전전 채무 46%, 전후 채무 52%를 삭감해 줬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전후의 자본주의 황금기는 없었을 것이다. IMF는 이 경험을 무시하고 70년대 이래 채무국에 구제금융의 굴레를 씌었다. 금융판 "리버럴 헤게모니"였고 현재의 극심한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를 초래하는 IMF 식 구제금융이 적용되면 팬데믹과 경제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번의 위기 때는 발전도상국에도 런던 협약을 적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⁶⁾ 이 선언 만으로도 불확실성의 패닉으로의 전환은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가 생산쇼크와 금융쇼크를 견뎌낸다 하더라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위기가 심각한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수요쇼크). 즉 그 동안 한국의 위기 탈출 시나리오였던 원화 절하 -> 수출 증가 -> 투자 증가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각국 정부의 정책 협력이 절실하지만 바이러스 위기는 관세장벽보다 더 심각한 국경폐쇄를 초래했다. 지난 3년간 중국과 미국이 경제전쟁, 군사적 마찰을 벌였다는 것도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나빠진 상황이다. 국제협력의 부재는 이번 위기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다.

여러 쇼크(바이러스 쇼크, 생산 쇼크, 금융쇼크, 수요쇼크)가 겹쳐져서 세계 곳곳이 위기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즉 지금 거론되는 V자, L자, I자⁷⁾ 침체 중 L자, 또는 밑바닥이 매우 긴 U자 형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하반기에 다시 바이러스가 발흥한다면 W자 침체가 될 수도 있다⁸⁾.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의 예측은 믿을 수 없다. 다만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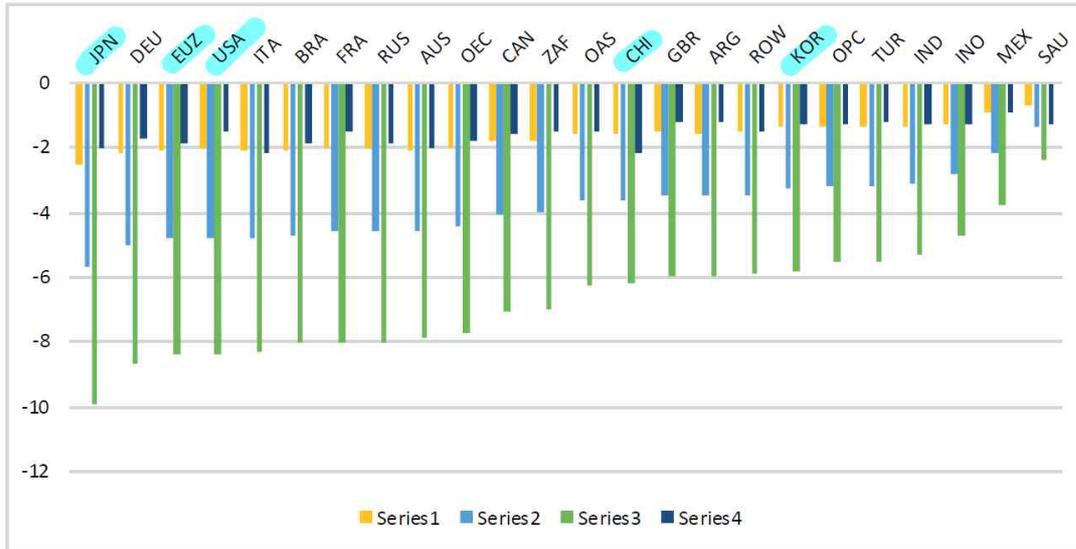
6) 다행히 IMF도 실업의 급증을 경계하는 글들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외채위기를 겪을 채무국에게 얼마나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7)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해서 유명해진 "닥터 둠" 루비니 교수의 주장으로 경제의 끝없는 급전직하를 말한다.

8) 경제예측기관들은 연이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3월 26일 발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경제정보실(EIU)은 G20 평균 성장률 -2.2%, 한국 -1.8%, 중국 1%, 미국 -2.8%, 독일 -6.8%, 프랑스 -5%, 일본 -1%로 예측했다(COVID-19 to send almost all G20 countries into a recession, Thu, 26th Mar 2020). 미국과 일본의 수치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12>와 상대적 순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림12> 쪽이 현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짐작한다.

충격을 받을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그러한 예측 중 하나이다.

<그림 12> 각국이 받을 경제 충격의 시나리오별 예측



Source: Estimates by McKibbin and Fernando, S4-S7, Global Pandemic Scenarios

<출처> Baldwin & di Mario, 2020, p25.

앞으로 경제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 이 예측은 상당한 수정을 거치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본,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한국의 상대적 순서는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다 침체에 빠지며 상대적으로 생산사슬이 짧은 산업, 내수 산업, 중소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은 이번 침체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며 대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대응 방향⁹⁾

전 세계 국가들이 잇따라 대응 정책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을 보여준 한국 정부는 매우 안이한 대책을 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그림 13>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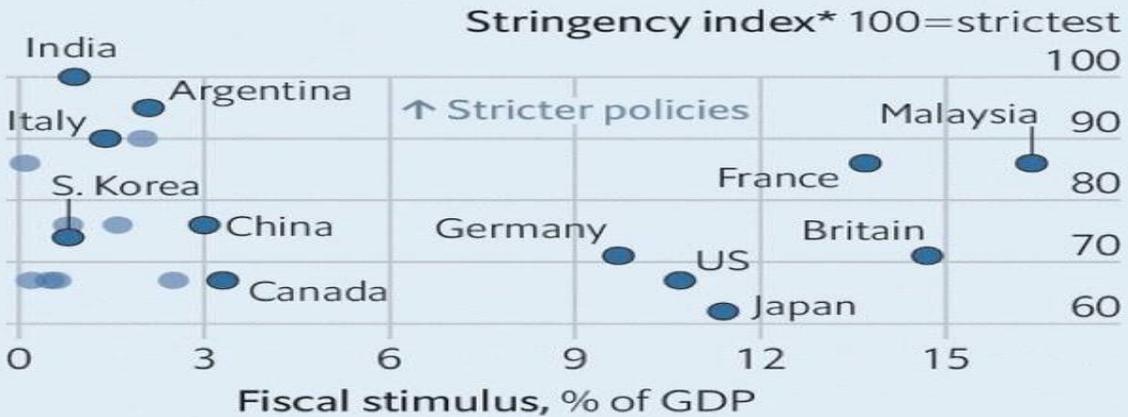
<그림 13>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반응

9) 정의당의 정책은 이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략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의당 정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Worlds apart

Government response to covid-19

Selected countries, at April 1st 2020



Source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Responses including school closures and restrictions on movement. Maximum score since outbreak began

The Economist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제정책(stringent index)으로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재정진작 정책(fiscal stimulus)은 GDP 1%에도 못 미친다. GDP의 10%를 넘어선 미국, 일본, 영국¹⁰⁾, 프랑스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러 쇼크가 겹쳐진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할지 짐작하기 어려우며 바이러스 쇼크와 결합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경제위기에도 방역과 마찬가지로 초동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매우 안이한 대책을 찔끔 찔끔 내 놓고 있다. 식당 등 자영업, 그리고 대우중공업과 쌍용자동차에서 보이듯이 위기 이전에 취약했던 곳부터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침체의 범세계성, 그리고 장기성에 비춰 볼 때 매우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익숙한 IMF식 구조조정은 위기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각국이 실업자를 막기 위해, 그리고 소득 보전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울프의 주장, “전쟁 때 정부는 쓰고 싶은 대로 쓴다. 지금도 그렇다. 재앙을 막으려면 정

10) 첫째 5년간 1,750억 파운드(약 262조 5천억원)의 경기대책(stimulus package)을 내놓은 수나크(Sunak,R) 재무상은 40살, 골드만 삭스 출신이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3,500억 파운드(525조원)을 추가했다. 영국 GDP의 15%에 이른다. 영국의 전통적 보수당에서 거대한 규모의 케인스주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연 허튼(Hutton,W)이나 스킨델스키(Skidelsky, R)의 환호처럼 케인스주의의 부활일까? 얼마나 빨리 바이러스를 잡느냐(별로 신통치 않다)와 재정투자의 내용이 중요하다.

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크게 생각하라. 당장 행동하라. 다 같이”(Wolf, 2020)는 지금 정부가 내 놓아야 할 대책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 준다.

바이러스 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막기 위해서는 현재 100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를 조금 더, 예컨대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¹¹⁾.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물리적 이동 거리를 줄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긴급 재난수당” 한 달치 100만 원은 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긴급 재난 수당은 소득보전 뿐 아니라 방역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학을 연기해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노인들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수직감염”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금년 가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2차 감염, 그리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발생할 신종 감염에 대비해서 의료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았지만 대구·경북의 환자 폭증 때는 의료자원의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다. 지역거점병원과 공공 의료원, 응급 병상, 의료 인력의 확대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배정해야 한다.

경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이러스 위기와 경제위기의 상호 상승작용을 막는 것이다. 즉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일단 살려 놓아야 한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할 때는 “무해고”를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¹²⁾. 그래도 발생하는 실업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¹³⁾, 특수고용 등 노동자성 논란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범위와 금액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거의 50만개의 독일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단기노동계획(short-term working scheme, Kurtzarbeit)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계획을 선택하면 노동자는 집에서 쉬거나 노동 시간을 줄여도 자기 월급의 2/3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직원의 월급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루프트 한자, BMW, 폭스바겐도 자신의 유능한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이 노동시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공과금은 유예(하위 계층은 면제)해야 하며 임대계약의 자동 연장, 임대료의 유예(및 삭감)를 대통령 명령으로 요구하고 무엇보다도 강제되거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이 실제로 이러한 의무 사항을 실천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11) 요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서는 1일 중환자 50명 이하일 때는 방역을 완화하고 100명 이상일 때는 강화하자는 기준을 내 놓았다.

12) 스티글리츠는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 금지,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엄금, 노동자와 환경에 유리한 실적을 요구했다.

13)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근로, 강연, 연주회, 전시가 취소되었다. 취약 계층,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의 급감을 막으려면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들 계약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해서 이후의 대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일반인들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에 관해서도 이자율을 낮추고 일부는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일반 채무 희년 (generalized debt jubilee), Stiglitz, 2020 참조).

경제가 이렇듯 불확실할 때 기업은 돈이 넘쳐나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그린뉴딜 산업정책을 제시했는데 원래의 10년치 계획을 앞당겨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군/구 단위 에너지 믹스의 확정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 에너지 비효율적 주택과 건물 개량.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동아시아 생태기금을 형성해서 팬데믹, 황사.미세먼지 등에 공동 대응하고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 건설,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의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즉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 정부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과의 1,500Km 국경에서는 단동을 중심으로 밀무역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지역에도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랜 침체로 인한 의료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북한은 오직 강제격리로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이란, 북한, 짐바브웨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료기기의 대미 수출을 요청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뿐 아니라 의료자원이 빈약해서 곧 대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한국의 우수한 진단키트를 구입해서 감염 초기에 있는 나라들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한 국제협력¹⁴⁾에서 한국은 또 하나의 모범 사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14) 스티글리츠, 로드릭, 바수 등 저명 경제학자와 의학자 20명은 G20 지도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